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농민과 통일

정 현 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1. 들어가면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가 반세기를 넘어서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고 있다. 갑오농민전쟁 이후 10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언제나 끝장낼 수 있을까?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민족수난의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단과 분열의 고통은 민중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만약 새로운 세기가 남쪽에서 주한미군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제거하지 못하고 시작된다면 21세기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조롱하면서 첫 쪽을 기록하게 될지 모른다.

지난한 반세 민족해방투쟁의 도정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앞장서 왔던 민중은 바로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민족수난의 최종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자존과 겨레의 생명을 지켜 온 애국자였다. 농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맨손으로 옥쇄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전란의 와중에 민족생존을 위해 모를 심고 손이 갈퀴가 되도록 농사를 지켜 왔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 냉혹하다. 5천년을 면면히 이어 온 민족농업이 WTO체제, IMF경제신탁통치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농업위기가 닥쳐 왔다. 남북의 식량자급률이 최악이다. 농지가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농산물가격불안은 구조화되고 있다. 지배권력과 가진자들은 농업을 무정부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관료들은 '농업투자무용론'을 떠들고 있다. WTO차기농산물협상은 자칫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을 완전 파탄낼 수 있는 괴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열악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영농의지와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준 농민들이 가격폭락과 빚더미에 시달리며 절망하

고 있다. 민족해방운동과 민중세상건설의 핵심대오였던 농민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민족의 혼과 기상을 간직해 온 농민들의 신명나는 노동요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지 않은가. 농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민족농업과 민족자주권을 지킬 것인가. 노동자, 민중이 주체라고 하지만 농민이 빠진 노동자, 민중, 민족민주주의는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농민운동은 노동자, 빈민과 연대하고 민족민주전선의 전면에서 나서 왔던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들이 중심되어 위력적인 민중투쟁을 전개하고 반제 민족자주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들이 통일운동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조국강토를 보전하여 찬란한 조국통일의 그날, 민족대통합의 역사적인 그날 “겨레의 먹을거리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농민들이 지켜 왔다”고 가슴 벅차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내에서의 농업대개혁 투쟁을 바탕으로 민족농업의 자주자립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남북농업교류와 자주적 농민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민족농업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2. 미국과 농민

1) 미군정하 농민운동

1945년 8월 15일 미군은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했다. 식민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남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장악한 뒤 경제를 틀어쥐었다. 1946년 당시 핵심사업 분야였던 농업에 대한 통제가 노골화되면서 일제 적산토지와 친일지주에 대한 농민들의 반환요구투쟁과 하곡징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일제하부터 소작인조합, 경작거부, 노농동맹 등 치열하게 투쟁해 왔던 농민운동가들은 완전한 민족해방, 농민적 토지개혁, 자주민주정부수립을 목표로 전국적 농민조직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을 300여 만 명의 회원을 조직하여 결성하였다. 전농은 정치적 노선과 강령에 입각하여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하면서 농촌지역 장악과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다.

전농은 미군정에 군사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반미자주화투쟁과 “농지를 농민에게”

라는 대중적 경제투쟁을 적절히 결합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농민운동과 농민적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조국통일이 전략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10.1 대구민중항쟁, 여순항쟁, 4.3제주항쟁, 전농과 전평의 전국적 민중투쟁과 함께 발전하던 농민항쟁은 미군정의 분열, 포섭, 테러, 학살을 동원한 점령지 원주민 탄압에 밀려 지하로, 유격전으로, 월북으로 분화되어 갔다.

당시 항미 지하활동과 유격전은 주로 취약지구의 농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한국전쟁으로 자주적 농민운동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좌절하고 이후 농민들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와 농업지배의 희생물로 전락하여 대대적인 빈민화, 유민화를 강제당하고 말았다.

2) 미국의 한국농업 재편

일제패망을 계기로 60여 년 만에 동아시아 진출의 기회를 잡은 미국은 남한에서 단기간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친미 종속화를 시도하였는데 경제 분야의 핵심적 지배전략이 농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다. 지난 세기 서구열강의 식민지 초과이윤 착취와 원주민 수탈보다도 훨씬 고도하고 장기적인 식민지배정책을 한반도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그 전후 식민지정책의 교범이 될 정도였다.

미국은 미곡수집령과 잉여농산물 원조로 식량수급을 통제하고 식량자급기반을 허물어 갔으며, 신한공사를 급조하여 농민들의 토지개혁요구를 무력화하면서 기만적인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던 민족민주진영의 ‘반민특위활동’을 테러와 여론조작으로 탄압하였고 전국농민조합총연맹, 협동조합운동과 같은 자주적 농민운동을 탄압하였다.

60~70년대 들어와 미국은 냉전체제하에서 자본주의의 우위를 입증하는 것과 신식민국가의 경제적 종속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으로서 분업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신식민지 공업화 경제예속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값싸고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농민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도시의 과잉인구를 최소한 연명시키는 유용한 방법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기조가 되었으며, 급격한 이농은 왜곡되고 기형화된 도시확장과 도시문제의 심화를 재촉하였다.

3) 수입개방요구-제국주의의 강력한 경제적 무기

80년대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개방농정이 가속되었다.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던 전두환 정권은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친미예속정권이었으며, 광주학살과 생우 수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농민들에게 생우 수입은 치명적이었다. 입식과 축사에 당시로서는 꽤 큰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소값 폭락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다.

개방농정은 남한의 전통적인 복합영농체계, 즉 쌀과 한우를 양축으로 하는 농업작목체계가 동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농산물 수입자유화조치, UR협상, 농업구조조정 등은 개방농정과 수입개방이 전제임과 동시에 수입개방의 전면화를 통한 남한농업의 토대와 자주자립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수미일관된 농업지배전략의 마무리 술책이다. 즉 군사적 강점과 식량수급 장악 등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약한 고리를 잡아 영원한 동북아 전진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IMF사태는 1996년 12월 워싱턴에서 은밀히 획책되었다. 이미 국제금융가에서는 1997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대북제제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구도 관철이라는 군산복합체와 보수강경파의 반미세력에 대한 저항도전쟁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IMF사태는 정권과 재벌, 보수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의도된 경제침략전략이 주요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전일적 시장체제와 완전 자본자유화를 시도하는 데 IMF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IMF가 짓밟고 간 나라는 외환위기, 식량위기, 물가고가 뒤따르고 국가주권과 민족자주권이 약화되고 대량실업사태와 불평등사회가 고착된다는 사실은 브라질, 멕시코, 소말리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3. 농업·농민과 통일

미국의 남한 농업지배의 핵심은 잉여농산물 원조를 비롯해 농축산물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마침내 남한의 식량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

편,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와 식량구입봉쇄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주자립적인 경제체제의 건설과 자주적 민족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2000년 현재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제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등 만성적인 식량부족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구상에 싱가포르,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식량자급률 29.3%는 가장 낮은 자급률이며, 자연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사막의 나라보다 자급률이 낮다.

민족의 생명이, 온 겨레가 먹을 하루 세 끼 중 두 끼 이상의 먹을거리가 ‘세계식량위기’라는 격랑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지훼손, 반복되는 자연재해, 농업생산 주체의 재생산 조건 악화 등으로 민족농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남한의 농민은 부채노예가 되었고 생산수단인 토지의 대부분은 자산계급, 금융기관에 빼앗기고 있다. 또한 남한의 농민들은 분열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반농민성과 분열, 농민단체와 생산자조직의 관변화, 농민운동의 통합성 약화 등 생산조직과 생산주체가 고립분산되어 있고 농업내부단결이 취약하여 반농업세력과 WTO체제에 대한 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민족농업을 지키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농이 빠른 시기 안에 농민들을 재조직화하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민족농업의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정보, 현물교환과 종자교류, 농민교류 등을 통해 남북농업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21세기는 식량위기가 심화되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면 경제전쟁과 군사적 대결 이전에 강대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농업생산력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농업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농지와 생산자현황을 파악하고 축산업실태, 종자, 관개수리, 농업용 각종 원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동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

WTO체제하에서 국영무역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관세, 수출보조금, 검역, 유통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WTO 이행특별법에 근거하여 민족내부간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남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북한은 영농자재가 부족한데 (가칭)‘통일농업 품앗이’ 또는 ‘남북농민협동운동’ 등을 조직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수단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교류, 협력은 범국민적, 거족적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WTO체제에 전민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제 자주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인으로

농민해방을 목표로 하는 농민운동의 궁극적인 전략 목적은 자주통일된 연방통일 정부의 수립이다. 이럴 때만이 농민들의 삶의 질과 각종 이익이 보장될 것이며, 지금까지 농민들의 삶에 질곡으로 다가온 외세의 식민지 농업지배와 가격폭락, 고리의 부채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연방통일 정부수립을 목표로 하는 자주통일운동과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동떨어질 수 없으며 농민들은 이제 자주통일운동의 대오에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할 때가 왔다.

사월혁명회보 제64호(2002.4)